

16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문화와 민주주의

: 개별적이고 사소한 일상에서 출발하는
어떤 문화에 대하여

김 창 훈

고양문화재단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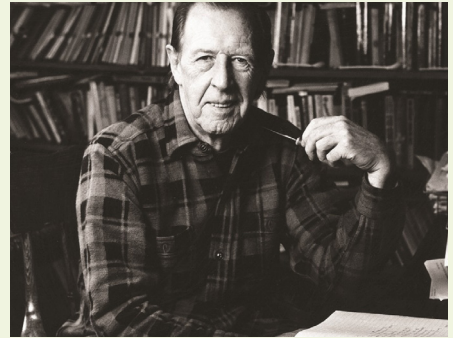
문화와 민주주의

: 개별적이고 사소한 일상에서 출발하는
어떤 문화에 대하여

김 창 훈

고양문화재단

문화는 다양한 의미로 정의될 수 있는 낱말이다. 문화연구 분야의 탁월한 선구자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문화를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난해한 서너 개 단어들 중 하나"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문화는 좁은 의미로는 '예술적인 것을 지칭하는 세련되고 진보적인 개념'을, 넓은 의미로는 '어느 지역



<사진 1>
저명한 문화연구자 레이먼드 윌리엄스
(Raymond Williams, 1921~1988)

이나 계층 및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보편성'을, 여기서 더 확장하면 '인간이라는 종(種)의 생활양식을 통칭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는 쉽사리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문화라는 어휘가 가진 의미를 개념적으로는 파악하고 있다. 저마다의 삶만큼이나 다양하게, 각자의 문화가 각자의 삶에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민주사회 시민이라면 누구나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파악하고 있다. 필자에게 민주주의는 시민 스스로 원하는 삶의 가치를 자유롭게 그려낼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원리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제도로서의 기능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저마다의 민주주의를 기본 신념으로 살아간다.

2017년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였고,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갈망하는 바로 이 시점, 우리는 어떠한 전환점에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하다. 대대적인 이슈를 만들어내는 정치경제의 어젠다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부터 시작하는 '문화'에서도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01

블랙리스트 사태

2016년 10월 이후, 우리 국민들은 하나의 이슈에 주목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연루된 희대의 게이트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었고, 제왕적 대통령마저 꼭두각시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어렴풋한 추측을 사실로 확인시켜주었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많은 국책사업과, 개별정책에 관한 필연적인 회의를 불러 일으켰다. 많은 이슈 중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파문이 일었던 것은 ‘블랙리스트’의 존재여부와 그에 따른 일관된 실행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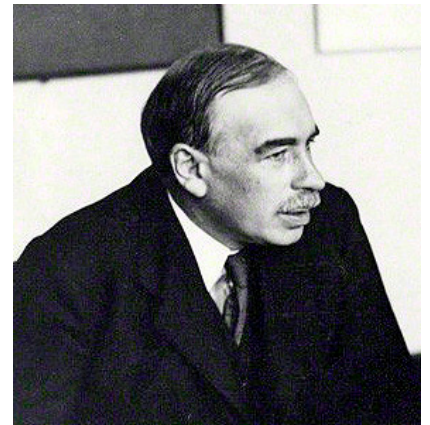
<사진 2>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로 연극인들을 중심으로 광화문에 세워진 광장극장 블랙텐트(극장장 이해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맞서 빼앗긴 예술가의 자유와 진정한 의미의 공공극장을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운동이었다.

(사진출처 : 광장극장 블랙텐트 페이스북 계정)

단순히 야당 주요인사의 지지선언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예술가들은 일평생 그들이 이룩한 예술적 성취는 무시당한 채 리스트에 이름이 올려졌고, 그들의 이름으로 신청한 대부분의 국가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일각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친밀한 몇몇 예술가만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는 단순히 소수의 예술가들에게만 정치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었다. 문학, 연극, 무용, 영화, 미술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문화예술계의 모든 분야에서 작동되었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문화체육부장관 등 정권의 핵심인 고위직 인사들까지 연루되어 은밀하고 체계적으로 실행되었던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보도 이후 문화예술계 대표적인 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게 되어버렸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는 전신인 문예진흥원 시절부터 국내의 대표적인 예술인들, 학자, 관료들이 임기제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공신력 있는 그룹이었기에, 위원회가 앞장서서 블랙리스트의 실행주체가 되었다는 소식에 예술인들이 느끼는 충격과 배신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명제로 삼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문화예술이 중심 가치가 되는 사회를 구현



<사진 3>
팔길이 원칙을 주장한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
(John Maynard Keynes, 1883~1946)

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지원했다. 당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벌어진 작금의 사태를 통해 상징적으로 대한민국사회의 명백한 퇴행을 목격하게 되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사유,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에 대해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예술가들을 놓고 정치적 논리로 줄 세우기를 시도한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퇴보의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은,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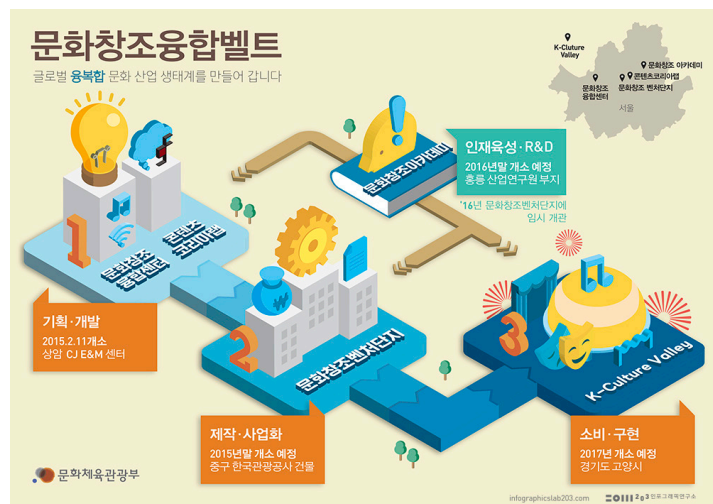
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자들을 엄정히 가려내어 확실히 죄값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지난 7월 27일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지시한 주요 인사들에 대해 1심 판결이 났으나, 국민의 정서와는 괴리된 가벼운 판결로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 블랙리스트 피해당사자이기도 한 서울연극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명백한 범법자들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간 결과에 대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피해자인 협회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한 시대의 예술가들을 검열하고도 가벼운 판결로 풀려난다는 것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것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토대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재판 결과를 주시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02

일상의 문화를
되찾기 위해서

집권 초기 박근혜 정부의 핵심 키워드였던 ‘창조경제’는 문화예술의 핵심가치인 창조성을 경제에 접목시켜보겠다는 야심찬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창의적인 비전이 구현된 유의미한 결과물의 사례는 극히 미미하다. 그도 그럴 것이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가 문화예술의 핵심인데, 이를 경제논리에 결부해 허울 좋게 만들어놓은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 실상은 권력의 신망을 받고 있는 자들을 위한 예산 몰아주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사진 4>

박근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설계도. 중장기적 안목으로 차근 차근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불과 3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겠다는 대표적인 졸속행정이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 문화예술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한 문화창조융합벨트는 2016년 총예산이 904억원에 달했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국제예술교류지원,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지역문화예술지원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투입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16년 총사업비가 2,195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 틀림없다. 더구나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문화창조아카데미의 연간 사업예산은 36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문화창조아카데미의 수강생은 39명에 불과하여, 산술적으로 1인당 9,200만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지원받은 셈이 되었다. 기업프렌들리 정책은 고수하면서, 서민들이 애용하는 담뱃값까지 인상하여 거두어들인 시민들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운용되었는지는 끝까지 규명해야 마땅하다.

<표 1> 2015 ~ 2017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내역

(단위: 백 만원)

사업명	2015년 결산액	2016년 계획액		2017년		
		당초	수정(A)	요구안	정부안	확정(B)
예술창작지원	28,666	27,390	27,390	29,102	24,459	24,659
예술인력육성	7,728	12,593	12,593	15,933	15,769	14,234
국제예술 교류지원	6,448	5,800	5,800	7,150	6,490	6,490
소외계층문화 역량강화	93,442	92,469	92,469	107,338	107,074	107,074
지역문화 예술지원	24,807	24,820	24,820	26,791	7,389	7,389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29,426) 관광기금	25,653	25,653	21,627	21,627	24,557
문화예술 사회적인식제고	31,787	30,865	30,865	33,645	31,593	31,593
합계	222,304		219,590			215,996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흔히 기초예술이라고 부르는 문학, 미술, 연극, 무용, 전통음악 등의 순수예술은 자생하기가 어렵다. 시장경쟁력, 수익성, 효율성 등을 운운할 대상이 아니다.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정책과 최소한의 사회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생계를 위하여 예술을 포기하게 되는 젊은 예술가들이 부지기수이다. 기본적인 생계조차 이어갈 수 없어 생을 마감한 젊은 예술인이 화제가 되고 나서야 예술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늦었지만 이 사회의 파수꾼인 예술인들의 복지와 생계에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그 누구에게도 최소한의 생존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 5, 6>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문화가 있는 날’과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세부사업인 문화창조아카데미 Cel 로고 이미지

또한 박근혜 정권 출범과 함께 문화예술의 융성을 목적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한 문화융성위원회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문화융성위원회의 대표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이 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영화관, 박물관의 시설 이용료를 할인해주고, 공연과 각종 행사들을 홍보하고 권장한다는 게 골자이다. 정부 차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장려하였지만, 공연예술이나 전시예술처럼 저변이 넓지 않은 분야에서는 정부 시책에 의해 울며 겨자 먹기로 다소 무리한 요구들을 수용했다

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경제 논리와 성과우선주의에 사로잡혀 소규모 공연장과 전시장에까지 실적에 대한 압박을 주기도 했다. 문화의 날 혜택을 받은 소비자들에게는 도움이 된 사업일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콘텐츠의 생산자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람료만 할인해주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문화예술의 질적인 성장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정책의 또 다른 폐해는 바로 문화를 한정된 무엇으로 규정한다는 데에 있다. 문화예술이 특별한 날에만 만날 수 있는 ‘무엇’이 되어야만 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이다. 이는 문화를 이벤트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품위란 스스로 만들 수 있지 않다. 타인의 인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품위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 역시 한 달에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화의 품위를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은 시민 각자의 몫이고, 그 토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03

시민의 연약한 일상이 만드는 문화



<사진 7>
영화 <택시운전사> 포스터 이미지

최근 개봉한 영화 <택시운전사>는 1980년 5월에 벌어진 현대사의 아픈 지점을 다루고 있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흥흥한 소문을 듣고 격동의 중심지였던 광주의 실상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에 온 독일기자와 함께 떠나는 택시운전사의 2박 3일 여정을 따라간다. 참혹한 실상을 전 세계에 보도하고자 하는 방송기자의 직업적 소명과, 몇 달 밀린 사글세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 장거리 운전을 자처해야만 하는 택시운전사의 고단한 일상, 무장한 군대에 이유 없이 공격받고 졸지에 폭도로 규정되어 죽음을 당하는 광주시민들, 언론통제를 위

해 철저히 검열을 시도하는 권력을 그려낸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민주화는 물론 문화 예술 분야 표현의 자유까지 바로 그 시절로 끌어 내리려 했다.

그로부터 37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극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기제들이 작동하고, 대책점에는 시민들의 연약한 일상이 존재한다. 집회의 소란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설치되었던 광장의 거대한 차벽과 물대포는 공고한 권력이 엄연히 존재하며, 끔찍하지만 우리사회가 아직도 과거의 억압적인 정권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걸 인정해야만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최소한의 제도적 역할은

필수불가결이다. 지난 정권에서 보여준 몰상식과, 불공정은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에 치명상을 입혔다. 지난 겨울 광장의 촛불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희구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다. 최소한의 상식으로, 다채롭고 열린 문화로, 자유로운 삶이 보장된 민주주의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나고 싶은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광폭한 물결에서 가만히 자기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길 원하는 시민들의 사소하면서도 개별적인 꿈이 부디 꺾이지 않길 바란다. 덧붙여 문화예술이 그런 도저한 민주주의를 열어가는 든든한 동행으로 기능하길 바란다.

참고 문헌

- 1) 존 스토리, 대중문화와 문화이론, 박만준 역, 제5판, 박문사, 2012
- 2) 김봉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진실, 이제 시작이다, 한겨레21 제1174호, 2017
- 3) 류정아,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진단과 방향 정립: ‘팔길이 원칙’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참고 웹사이트

- 1)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
-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www.arko.or.kr
- 3) 서울연극협회 홈페이지 www.stheater.or.kr
- 4) 광장극장 블랙텐트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theaterblack

문화와 민주주의

: 개별적이고 사소한 일상에서 출발하는
어떤 문화에 대하여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17년 8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층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없이 전재 및 인용을 금함

